

축산업의 生存力 배양정책은 무엇인가?



한 백 용
(대한양돈협회 전무이사)

얼마전 美國 농촌 출신의 그레슬리 상원의원(아이오와주)이 농업·축산 생산자 단체의 대표(미국양돈협회장, 미국대두협회장, 미국옥수수협회장) 및 주한 미국대사관 농무관 등과 함께 본회를 방문하였다.

우리는 그들 일행에게 한국 축산업계에서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수입해 온 가축과 사료 곡물 등의 양과 금액을 연도별로 설명하며, 우리 스스로도 깜짝 놀랄만큼 그 수입규모가 엄청나게 큰 것에 놀랐고, 미국은 한국이 그들의 농산물 수입국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케 하였다.

그러나 그들 일행은 한국이 미국의 가축(종축)이나 사료 곡물만을 수입할 것이 아니라, 아예 돼지고기를 비롯한 축산물을 수입하라는 권고를 하였고, 우리는 그들의 이와같은 발상과 사고에 어이가 없었다.

수출지향적 韓國經濟의 高度成長과 무역수지흑자의 확대에 따른 시장개방의 통상압력이 불가피하며, 이와같은 통상압력에 굴복하여 마지막 시장개방을 해야 할 대다수의 품목이 바로 급속한 공업화의 정책속에 소외되었던 어려운 환경의 농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농축산물인 것이다.

이와같은 국제교역의 증대와 무역수지흑자 발생에 따른 경제 여건의 변화와 농축산물 시장개방의 불가피성을 예견한 축산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은 이미 수 년전부터 우리나라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건의, 제도개선건의 등 수없는 대정부 건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66

정부는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보상차원의 단기적 지원정책이 아닌
축산업의 국제적 생존력을 배양하는 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99

농축산물의 수출국인 선진국에 비하여 생산기반이 영세한 국내 축산농가의 보호가 곧 국가와 민족의 생존산업을 보호하는 길이요, 자원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는 길이므로 시장 개방의 선결요건으로서, 농민의 생산여건을 선진수출국 수준으로 조성하고 각종 불합리하며 전근대적 제도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제, 이와같은 건의 내용이 무엇이며, 국제경쟁력 향상의 방안이 무엇인지는 양축농민의 수준에서도 충분히 알고도 남을 수준에 와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보편적이고 타당한 축산업계의 수없는 建議事項에 대하여 政府當局은 養畜農民이 납득할 만한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대책에 급급하였다.

이제 심각한 통상압력으로 농축산물의 시장개방을 목전에 두고 어떤 정책으로 양축농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가?

농축산분야의 그 어느 제도가 과연 선진국과 경쟁을 할만한 수준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가?

무엇이 이와같은 때를 준비하여 수립한 정책이었다고 우리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가? 축산 원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제도인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도 되지않는 축산물 생산원자재의 부가세인가? 축산금융제도와 축산자금의 금리인가? 고객에 따라 15%~20%를 덤핑 판매하면서도 사료가격을 인상하고 곡물의 사용제한과 국산 옥수수 높은 수매가를 양축농민에게 전가시키는 사료의 시책인가? 출하농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유통개선 정책인가?

영국이 구라파 공동시장(EEC) 가입을 10년간 유보했던 이유도 바로 자국의 1차산업 경쟁력이 미약해 자국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던가?

우리 양축농민은 축산물 수입에 따른 피해 양축농가의 보상차원의 단기적 지원정책이 아닌 축산업의 국제적 생존력을 배양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